

미래연구원 브라운백

2019. 8. 9

미중갈등의 본질과 전망

강 동 수

Korea's Leading Think Tank



목 차

1

중국경제의 현황

2

중국의 특수성

3

시진핑 시대의 변화

4

미중갈등의 전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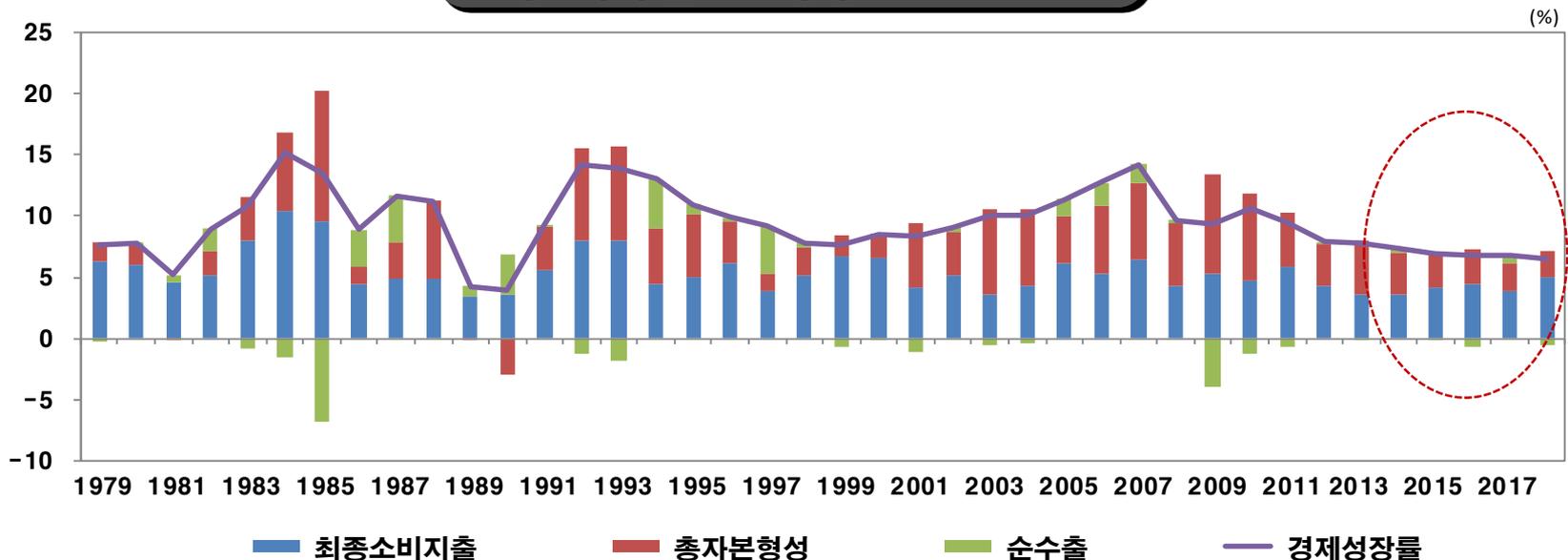
중국경제의 현황

1-1.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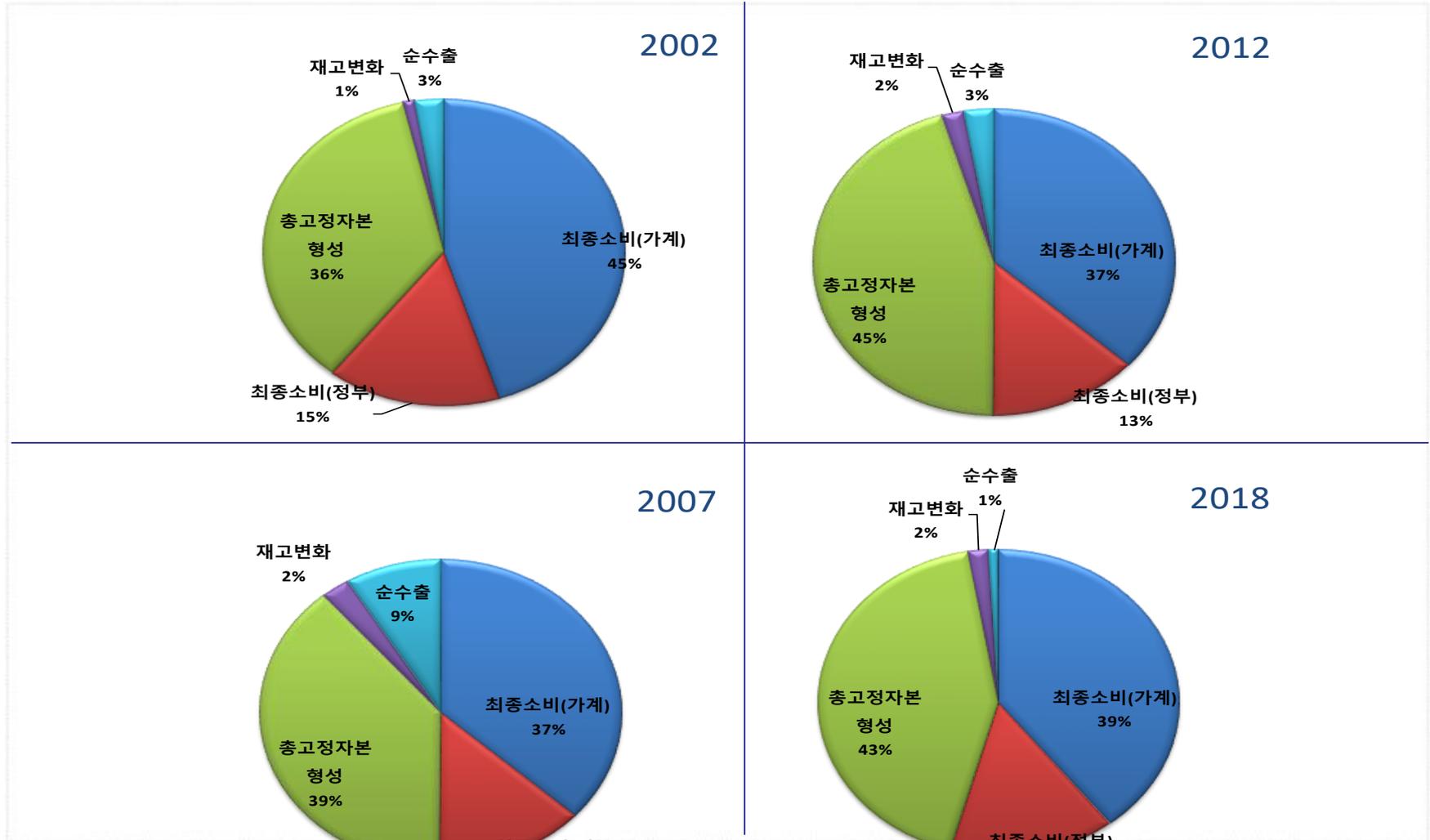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 하락세

- 1979년 개혁개방 이래 연평균 GDP증가율 9.5%를 기록하였으나 글로벌 위기 이후 하락세
- 최근 몇 년간의 투자의 평균성장기여도는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냄
 - ✓ 2010년 투자의 평균기여도가 7.1%p를 달성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 2.1%p를 기록
 - ✓ 반면 2018년 소비의 기여도는 5.0%

경제성장률 및 성장기여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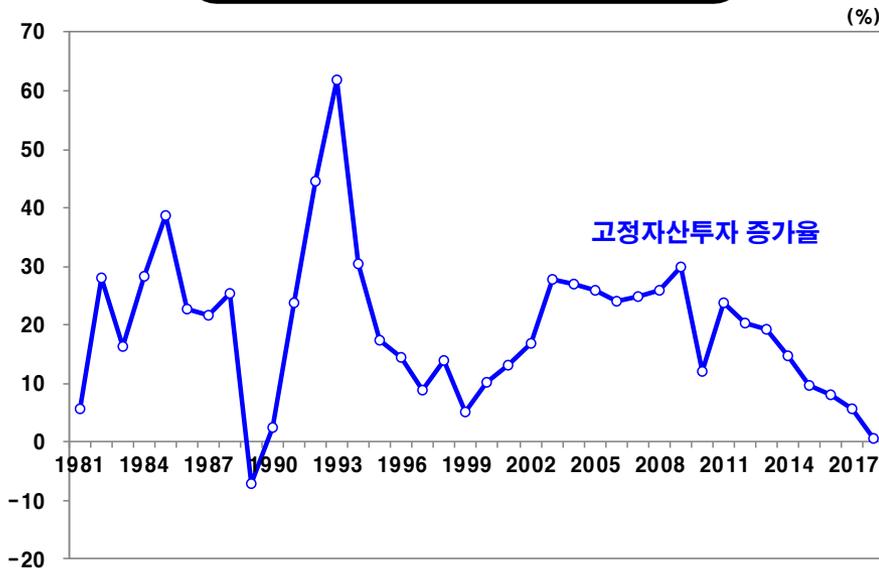
1-2. 소비 및 투자 비중 변화



1-3. 높은 투자 증가율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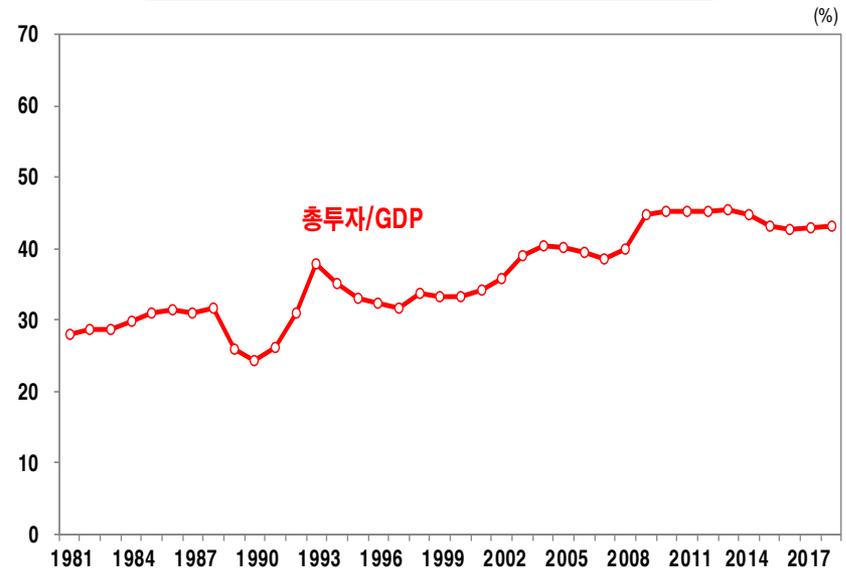
- ❖ 투자의 둔화세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투자의 비중은 여전히 높은 상황
 -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1993년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둔화세를 지속
 - (평균증가율) 1981~1999년: 21.1%, 2000~2018년: 17.9%, 2018년은 0.69%를 기록
 - ✓ 하지만 GDP대비 총투자 비중은 '02년 35.8%에서 '18년 43.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자료: CEIC

총고정자본형성 /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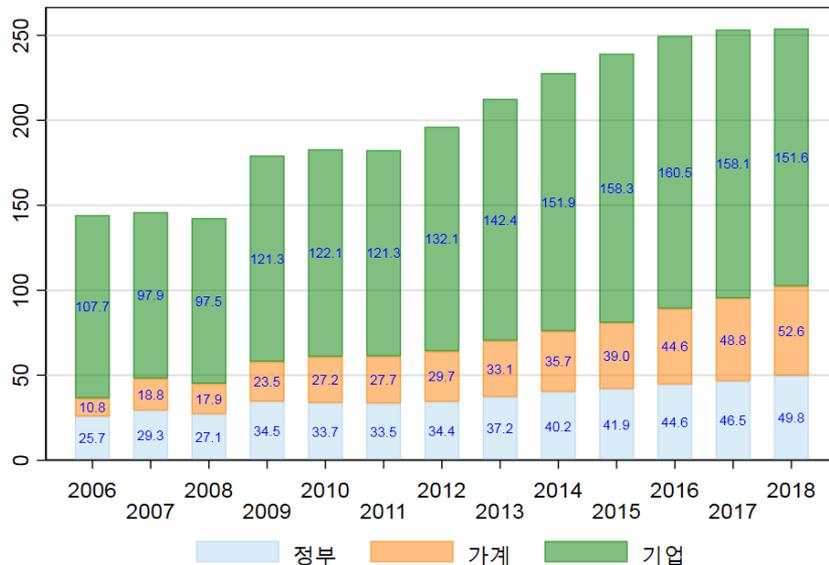
자료: CEIC

1-4. 총부채 및 구성

❖ (BIS 기준) 중국의 GDP대비 부채비중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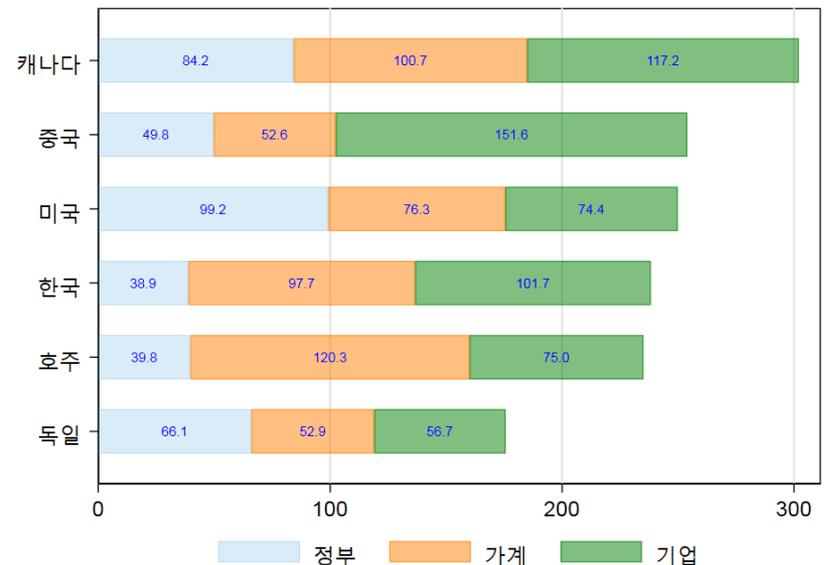
- 2018년 GDP 대비 중국의 부채비중(비금융영역)은 약 254.0%를 기록
 - ✓ 정부,가계,기업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 ✓ 국가간 비교에 있어 중국의 부채구조는 정부나 가계보다 특히 기업부분의 기여도가 높은 상황

GDP 대비 각 경제주체 부채비중



자료: BIS, 정부는 GDP 대비 nominal value를 나타냄

국가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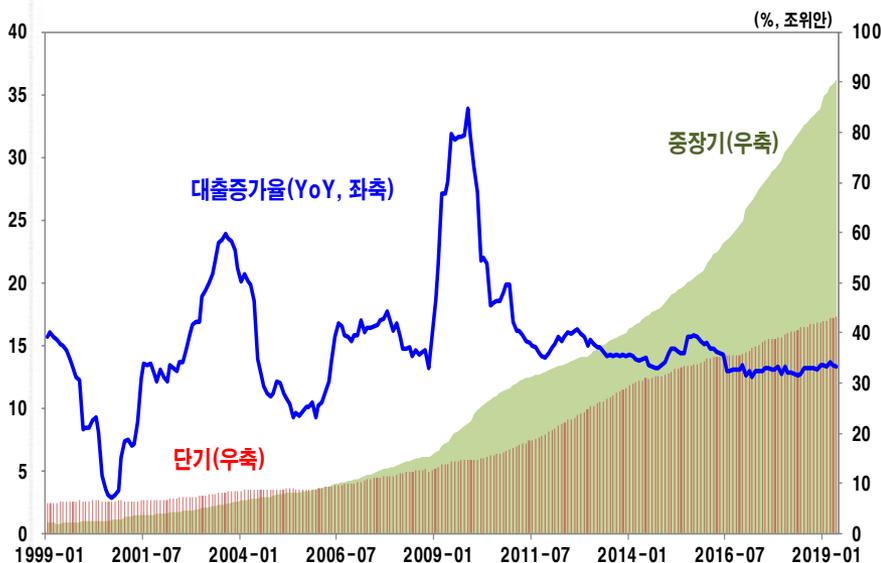


자료: BIS

1-5. 대출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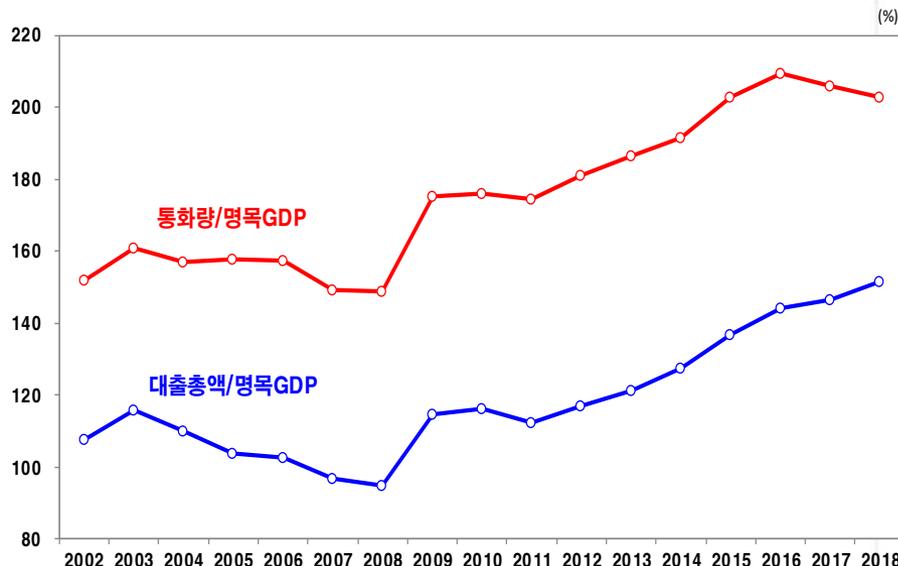
- ❖ 대출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감했으나, 최근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
 - 2000년 중후반에 이어진 신용공급 증가는 특히 중장기대출에 기인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인 신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
 - ✓ 글로벌 위기 직후의 통화량 및 대출총액 비중은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냄

대출증가율



자료: CEIC

GDP 대비 통화량과 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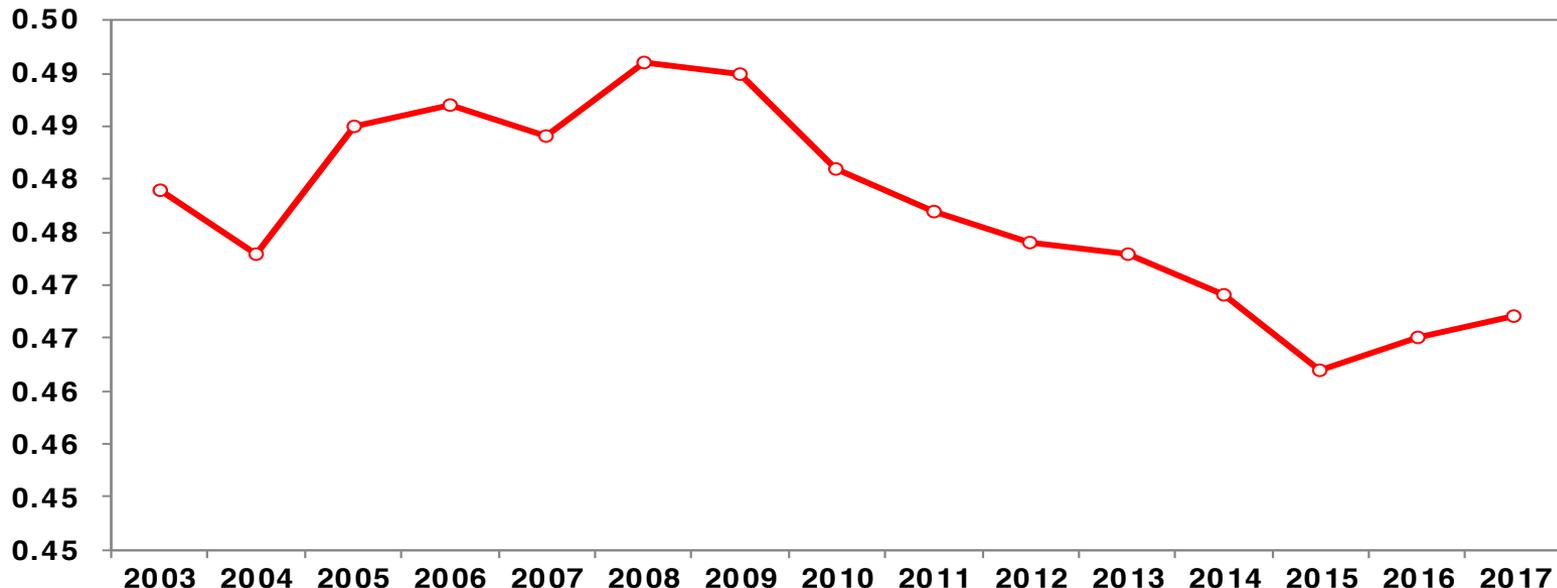


자료: CEIC

1-6. 소득불평등

- ❖ 개혁개방 이후 악화되었던 소득불평등은 제11차 5개년계획의 민생정책 이후 개선
 - 지니계수는 2008년 0.49를 정점으로 **소폭 개선**되는 상황
 - ✓ 가장 최근인 2016~2017년 지니계수는 0.465, 0.467로 소폭
 - ✓ (03) 0.479 → (08) 0.491 → (12) 0.474 → (14) 0.469 → (17) 0.4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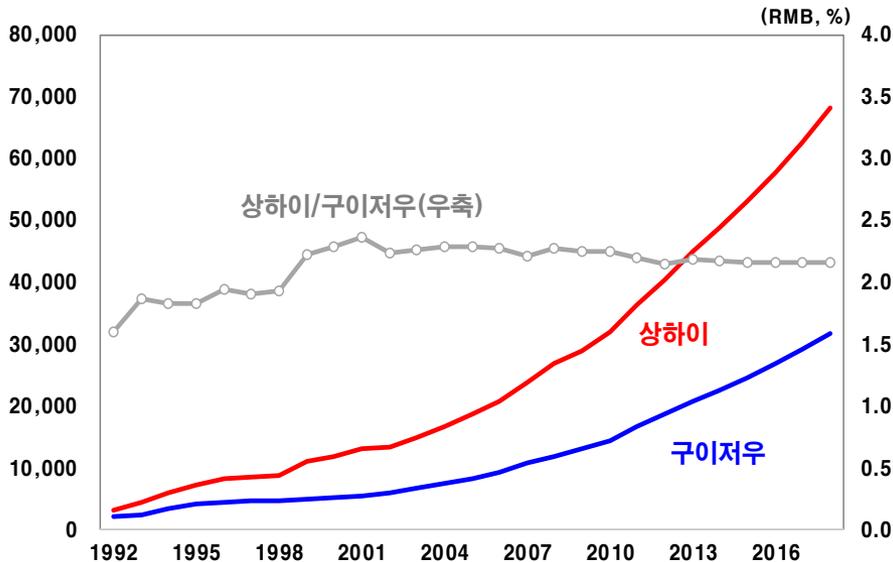
지니계수



[참고] 지역간 소득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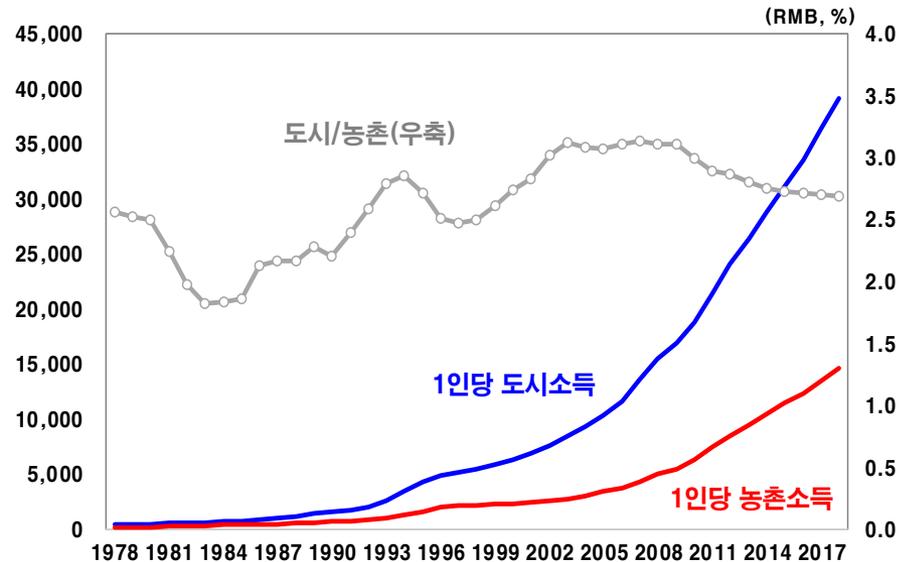
- ❖ 개혁개방 이후 불균형 성장전략에 따라 지역간 소득격차 격차가 큼
 - 최근 연해지역과 내륙지역,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가 다소 축소되기 시작
 - ✓ 상하이와 구이저우 소득 배율: (05) 2.29 → (10) 2.25 → (14) 2.17 → (18) 2.15
 - ✓ 도시와 농촌 소득 배율: (05) 3.08 → (10) 2.99 → (14) 2.75 → (18) 2.69

상하이와 구이저우의 소득 격차



자료: CEIC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



자료: CEIC

2

중국의 특수성

2-1. 중국특색 사회주의

❖ 보편성: 사회주의

- 자본의 통제 및 관리를 통한 공산당의 자율성 확보
 - ✓ 국유부문이 중심인 가운데 민간기업이 보조하는 시스템
 - ✓ 중앙국유기업(국가)이 최대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
- 정부(보이는 손)와 시장(보이지 않는 손)의 관계
 - ✓ 시장은 자원 분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정부의 역할을 양호하게 수행하도록 지원
- 공산당 체제 유지의 3대 기초: 국유기업, 언론, 군대
 - ✓ 국유기업과 언론은 경제성장 및 글로벌화, 인터넷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통제력이 점차 약화 추세

❖ 특수성: 중국 특색

- 중국 특색이란? **역사의존성, 유연성**
 - ✓ 역사의존성: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본주의 (以民爲本) – 민주보다 공산당 집권 정당화
 - ✓ 유연성: 실사구시적 실용성을 발휘하여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예: 자본가를 공산당원 인정)
-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연원
 - ✓ 서구 시민사회의 성장과 자본계급의 등장이 없이 **봉건제사회가 곧바로 사회주의로** 변화
 - ✓ 국민당의 관료자본주의, 패권주의에 대한 **민심이반**으로 공산당의 집권 공고화

2-2. 개혁 · 개방

❖ 정치적 배경

- 대약진의 실패와 마오쩌둥의 실각
- 文化革命(1966~1976): 紅과 專의 사상투쟁적 성격, 紅의 승리
- 덩샤오핑의 복권(1973), 마오쩌둥의 사망(1976)

❖ 경제적 논거

- 중공업 주도 발전 전략의 실패, 생산성 하락 및 국가경제 피폐, 아시아 4龍의 부상
- 경제유인의 왜곡과 저효율
- 덩샤오핑: “사회주의를 견지하지 않고 개혁개방을 하지 않으며 경제를 발전시키지 않고 인민의 생활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죽음의 길 밖에 없다”

❖ “하나의 중심, 두개의 기본점” 을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실천으로 설정

- 하나의 중심: 경제건설
- 두개의 기본점: 개혁개방과 4항 기본원칙

✓ 4항 기본원칙: 사회주의, 인민민주독재, 공산당 영도, 마르크스 · 레닌주의

2-3. 개혁개방의 비전: 三歩走

❖ 원바오(溫飽)

- 인민의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 초보적 단계
 - ✓ 20세기 말까지 달성하기로 목표했으나, 1980년대 말에 조기에 완료

❖ 샤오강(小康)

- 의식주가 해결된 중등이상의 사회
 - ✓ 불우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기본생활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상태
 - ✓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달성을 목표
 - ✓ 2002년 11차 전인대에서 장쩌민 총서기는 중국이 샤오강사회에 진입했음을 선언

❖ 다통(大同)

- 완벽한 평등, 안락, 평화가 있는 이상적인 복지사회 (禮記 禮運에서 유래)
 - ✓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달성
 - ✓ 경제적으로는 미국에 버금가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부를 공유하는 체제

2-4. 중국 사회주의의 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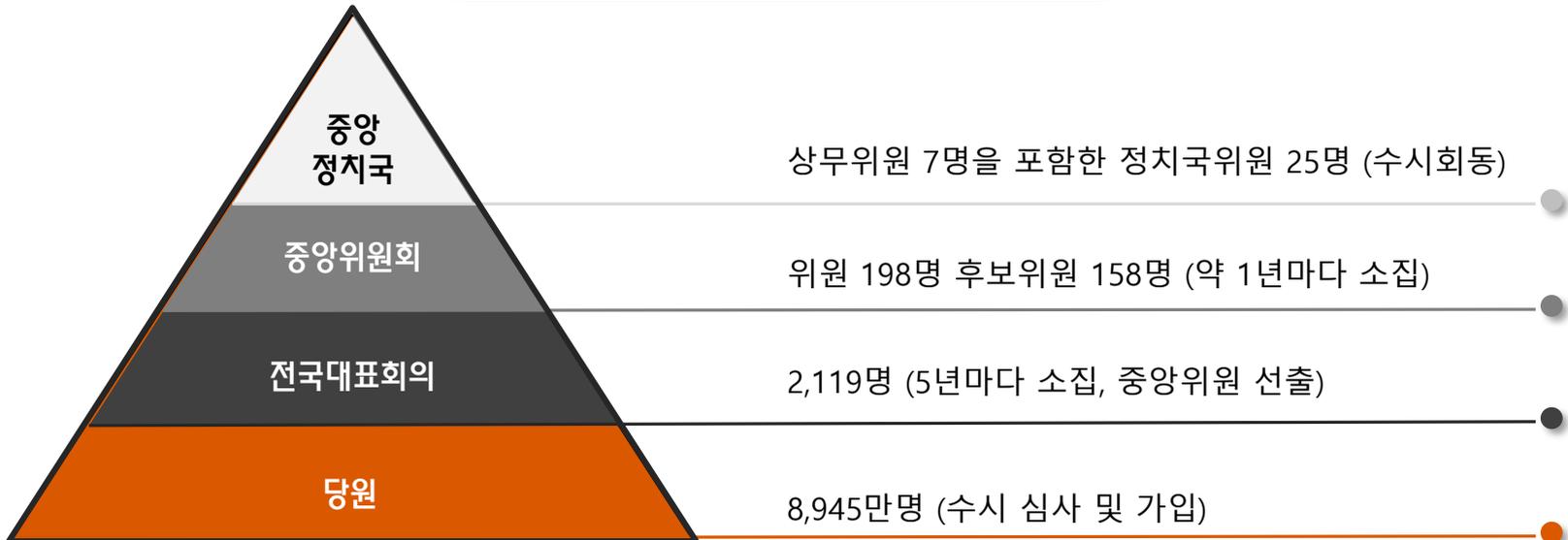
- ❖ 사회주의 1.0 (마오쩌둥의 均富論, 원리적 사회주의)
 - 낙후된 생산환경에서도 공평한 분배가 핵심 복지정책이자 체제정당성의 근거
 - ✓ 공유제와 계획경제가 핵심 정책수단
- ❖ 사회주의 2.0 (덩샤오핑의 先富論,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 유연성과 효율성 강조 (實事求是)
 - ✓ 생산력 발전을 통해 빈곤 퇴치 및 성장 (앵거스 디턴의 “위대한 탈출”)
 - 배금주의 등 부작용은 절대빈곤 상황에서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 불가피하다고 정당화
- ❖ 사회주의 3.0 (시진핑의 共富論, 사회주의 중고급 단계론)
 - 개혁개방의 피로 심화로 사회주의 정체성 의심
 - ✓ 문제의식: “중국은 발전하는데 왜 인민생활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되는가?”
 - ✓ 단웨이(單位)에서 이탈한 기층인민으로부터 복지의 위기감 고조
 - 중국식 사회주의의 대안: 정치가 관료화를 극복하고 기층으로의 회귀(經世濟民)
 - ✓ 관료화의 폐해라는 대표성 위기와 주체성 상실에 따른 정당성 위기 직면
 - ✓ 부패척결이 최우선적 과제로 등장

2-5. 정책결정체계

❖ 최고정책기구: 공산당중앙위원회전체회의(中全會, 매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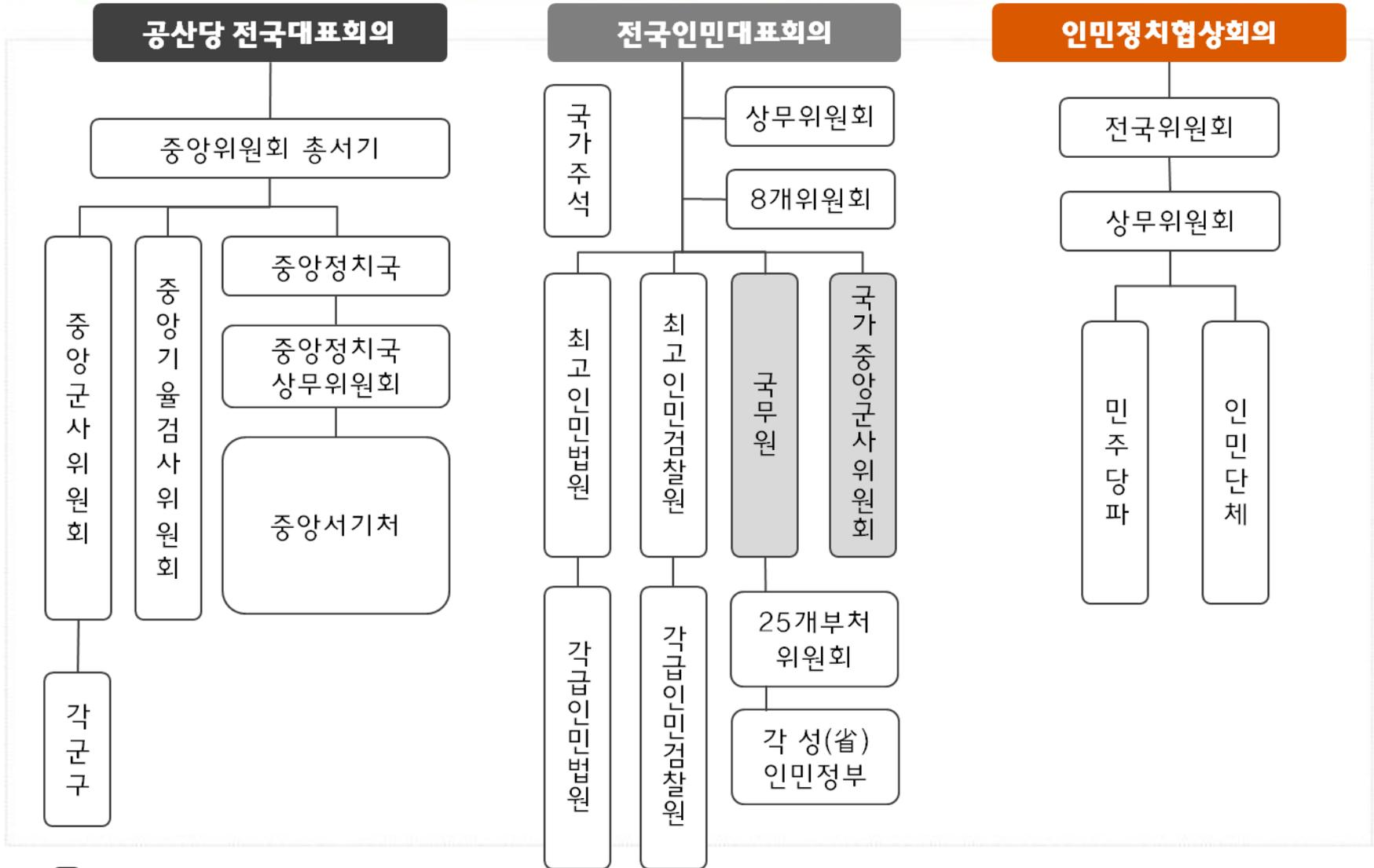
- **중전회**: 국가전략의 근간; 전인대: 세부정책 결정; 국무원: 집행
- **1중전회**: 당조직기구 인선 및 명단 건의; **2중전회**: 국가조직기구 인선 및 명단 건의; **3중전회**: 체제개혁 설계; **4중전회**: 당의 건설, 의법치국 등 중대문제 토론; **5중전회**: 경제발전5개년 계획; **6중전회**: 기타 중대한 전략적 문제 토론; **7중전회**: 차기 당대회 준비회의

중국 공산당 권력구조



* 전국대표회의(당대회)에서 2,000여명의 전국대표들이 중앙위원 200여명을 선출, 그들이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중전회)에서 상무위원 7명을 포함한 중앙정치국 위원 25명을 선출

[참고] 중국 정치권력 조직도



: 5대 주요 권력 기구

[참고] 分工체제: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이름	시진핑	리커창	리잔수	왕양	왕후닝	자오러지	한정
직위	당 총서기 국가주석 군시위주석	국무원총리	전인대 상무위원장	부총리	중앙서기처 상무서기	기율검사 위원회서기	상하이 당서기
생년	1953	1955	1950	1955	1955	1957	1954
출신지	베이징	안후이	허베이	안후이	산둥	산시	저장
계파	태자당	공청단	시자원	공청단	??	시자원	상하이방

3

사진평 시대의 변화

3-1. 성장을 둔화 및 대응

❖ 성장을 둔화의 원인

- 인구고령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그간 누리던 인구보너스 소멸
 - ✓ 2015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여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 예상
- 세계경기 침체 장기화: 수출 주도 성장에 제약
- 정책기조: 개혁개방의 후유증으로 **성장을 둔화를 초래하는 정책 불가피**
 - ✓ 반부패(소비위축), 친환경(에너지 고비용), 친서민(고임금)
- 단기적 요인: 주식시장 폭락에 대한 대응 실패로 정치적 리더십 손상 가능성,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 증가(천진항 폭발)

❖ 성장을 둔화에 대한 대응

- 리코노믹스 → **신창타이(New Normal)**
 - ✓ 리코노믹스: 무리한 경기부양보다 성장을 하강을 **허용**하는 구조조정 강조
 - ✓ 신창타이: 최소 성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구조적 변화에 대응한 구조조정 실시
- 소비주도성장을 추진하여 내수를 견인
 - ✓ 소비의 제약요인: 고령화, 임금증가율 둔화, 반부패 지속
- 창업·혁신을 촉진하고 자본시장을 육성

3-2. 정책의 변화

- ❖ 정책의 3대 기본방향: **반부패, 친서민, 친환경**
- ❖ 통화 · 신용 · 외환정책
 - 과거에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가 모두 흑자인 가운데 유동성 흡수가 관건
 - ✓ 기준율, 예대비율, 대출총액한도 부여 등으로 대응
 - 향후에는 해외부문 자금유출로 인한 국내유동성 보강이 관건
 - ✓ 미중갈등 이전: 위안화 고평가를 해소(평가절하)하여 자본이동 억제
 - ✓ 확장적 통화정책(양적통제 축소, 금리인하 등)을 추진
 - ✓ 다만, 부동산시장의 버블화 우려
- ❖ 재정정책
 - 성장세 유지를 위한 확장적 재정 필요
 - 지방재정의 위험성을 반영하여 정부와 재정의 파트너십 추진
 - ✓ 지방정부융자플랫폼의 부채를 국유기업에 이전시키는 PPP 시도
- ❖ 금융정책: 점진적인 개방을 통한 개혁
 - (대외) 위안화 국제화, 변동환율제, 자본시장 개방
 - (대내) 금융자유화(금리자유화, 양적규제 철폐)

3-3. 시진핑 시대 주요정책 키워드

❖ 중국몽

- (대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 ✓ 2개의 100년: 2021년(공산당), 2049년(중화인민공화국)
- (대외) 인류운명공동체 건설
 - ✓ 상호존중, 공평정의, 상생협력 → Beijing Consensus의 주요 내용

❖ 중국제조 2025

-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제조업 강국 지향
 - ✓ 10대 핵심산업: 정보기술, 기계·로봇, 우주항공, 해양·선박, 철도, 에너지·자동차, 전력, 농업기계, 신소재, 바이오·의료기기

❖ 일대일로

- 중국주도의 새로운 국제질서 건설
 - ✓ AIIB 설립, 도로·항만 등 인프라 확충(국내과잉설비 해소)

❖ 혼합소유제 개혁

- 국유기업과 민영기업간 지분 교환 및 경영전문성 확충
 - ✓ 國進民退적 성격

[참고] 2015년 주식시장의 폭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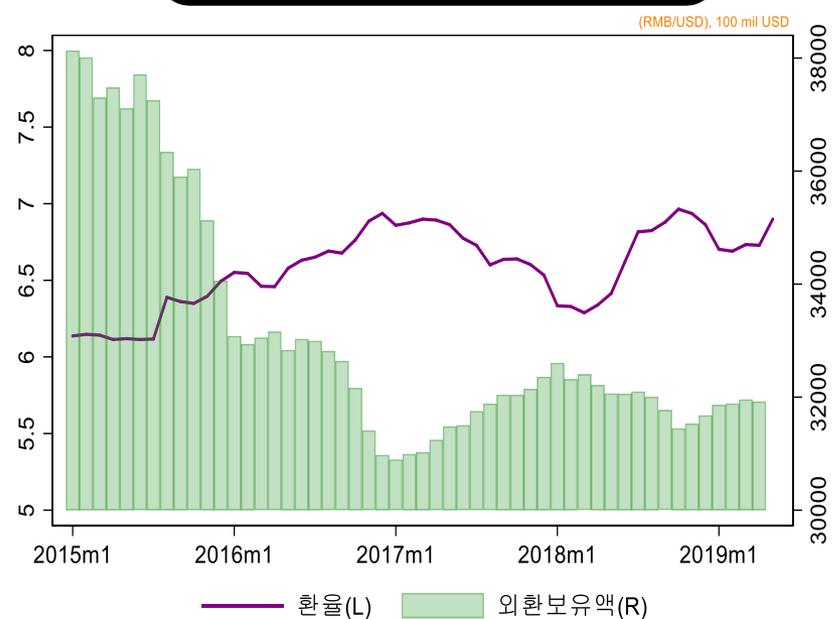
❖ 증시부양책 → 주식시장 폭등 및 폭락

- '15년 6월 12일 5,166에 달했던 상하이주가지수가 '16년 1월 28일 2,656까지 하락
 - ✓ 개인의 투기성 투자가 레버리지와 결합하면서 이상 급등
 - ✓ 주가 폭락에 대한 중국정부의 반시장적 개입 및 실패
 - ✓ 대규모 자본유출과 외환보유액 급감 (국영기업의 해외투자 명목 외자유출과 연관)

상하이주가지수 추이



환율과 외환보유액



3-4. 중국경제 평가(1): 내부의 인식

- ❖ 경기하방 압력이 커졌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경착륙 가능성 거의 없음
 - 뉴노멀시대(신창타이)에 혁신과 개방(외자 및 전문가 유치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 6% 성장수준은 주요국가를 상회하는 수준
 - ✓ 정부는 금융, 재정·세제, 국유기업 등의 전반적인 개혁을 통해 구조조정과 성장동력 확보 가능
 - ✓ 인프라건설 가속화, 감세 및 효율적 자금 분배 등 정책의 조기집행을 통해 성장목표 달성 추진
 - 인구보너스 효과 소멸 등으로 성장률의 추세적 하락 불가피
 - ✓ 노동생산성 제고, 국유기업 및 자산재배치, 행정개혁,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등 구조개혁 노력 필요

- ❖ 다만, 주요 경기불안 요인으로 글로벌 경기침체, 부동산투자 위축, 과잉설비, 은행부실 채권 증가 등에 주목
 - 특히, 최근 주식시장의 급등락과 무리한 증시개입에 따른 부작용의 여파로 향후 금융개방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
 - 중장기적으로 시장원리를 도입해야 투자수익률을 높이고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는 의견 존재

3-4. 중국경제 평가(2): 해외의 전망

- ❖ 전반적으로 경착륙 가능성을 여전히 낮게 전망하는 분위기
 - 소득수준 향상, 견조한 소비 수요, 서비스업 호조 등을 감안할 때 중국경제 둔화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경계할 필요
 - ✓ 수출에서 소비 중심 경제체제로 원만하게 전환되는 과정 (소비증가는 소득증가에 기인)
 - ✓ 투자증가율이 하락하였으나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로 경기 하방압력 완화
 - 은행간 채권시장의 개방으로 총수요가 증가하고 지방정부 채무가 경감되어 신용도 상승
 - 성장률 6%대로 하락하겠지만, 5%대 이하의 경착륙 가능성은 낮음
- ❖ 일각에서는 부동산시장 하강, 지방정부부채 과다, 그림자금융 등 **내부적 요인**이 **해외중**과 결합할 경우 경제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 제기
 - 주가와 환율 등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될 경우, 실적이 부진한 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은행부실로 이어질 가능성
 - 성장의 구조적 둔화가 장기화되고 그림자금융 부실, 단기금리 상승, 환율 불안 등이 시스템 위험 요인으로 작용
 - ✓ 경기하방에 대응한 정부의 유동성 확대 조치도 금융리스크를 증대

4

미증갈등의 전망

4-1. 미중갈등의 연혁

★ 연혁표 (2018.3~ 2018.8)

날짜	주요 이벤트
2018.3.22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국산 수입품(500억 달러)에 관세부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중국의 대미 투자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서명
2018.3.23	중국, 돈육 등 30억 달러(약 3조1천900억원) 규모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예고
2018.4.2	중국, 미국산 돈육 등 8개 품목에 25%, 120개 품목에 15% 관세 부과
2018.4.3	미국, 중국산 통신장비 등 25% 관세부과 대상 500억 달러 규모 품목 발표
2018.4.4	중국, 미국산 대두, 자동차 등 106개 품목에 25% 관세부과 방침 발표
2018.5.3~4	미중, 베이징서 무역협상
2018.5.17~18	미중, 워싱턴서 무역협상
2018.5.28	미국, 중국산 첨단기술 품목 25% 고율 관세부과 강행방침 발표
2018.6.2~3	미중, 베이징서 무역협상
2018.6.18	트럼프,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추가 보복관세 부과 경고
2018.7.2	중국, 미 반도체기업 마이크론 제품 중국 내 판매 금지
2018.7.6	미중, 상호 340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2018.7.10	미국, 중국의 보복관세에 대한 재보복 조치로 2천억 달러에 10% 관세부과 계획 발표(9월 발효 예정)
2018.8.22~23	미중 워싱턴서 무역협상

4-1. 미중갈등의 연혁

★ 연혁표 (2018.8~ 2019.5)

날짜	주요 이벤트
2018.8.23	미중, 상호 160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25% 관세부과
2018.9.24	미국,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부과. 중국, 600억달러 규모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 부과
2018.12.1	미중 정상, G20 정상회의에서 향후 90일간 추가 관세부과 유예 및 무역협상 재개 합의
2019.1.7~9	미중, 베이징서 무역협상
2019.1.30~31	미중, 워싱턴서 무역협상
2019.2.14~15	미중, 베이징서 무역협상
2019.2.19~20	미중, 워싱턴서 차관급 무역협상
2019.2.21~24	미중, 워싱턴서 고위급 무역협상
2019.2.24	미국, 2천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 보류
2019.3.28~29	미중, 베이징서 무역협상
2019.4.3~4	미중, 워싱턴서 무역협상
2019.4.30~5.1	미중, 베이징서 무역협상
2019.5.5	트럼프 대통령,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 · 3천250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 부과 계획 발표
2019.5.9~10	미중, 워싱턴서 무역협상 결렬
2019.5.10	미국,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 10%에서 25%로 인상
2019.6.29	G20 미중 정상회담

4-2. 미중갈등의 이해

- ❖ 성격: **헤게모니 다툼**
 - Make America Great Again vs. 중국몽
 - Washington Consensus (자유주의) vs. Beijing Consensus (국가주의)
- ❖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중국은 견제한다는 **동일한 인식**에도 방식상 차이
 - (Obama) **규범적 접근**
 - ✓ TPP: SOE, Intellectual Property
 - (Trump) 직접적 **제재**
 - ✓ 관세부과. 시장개방 · 공정무역 요구
- ❖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대중 강경파)의 단면
 - Michael Pence의 발언: Hudson Institute 연설
 - ✓ 불공정국가: “전방위적으로 미국의 선의를 속인 국가 ”
 - Steve Bannon의 견해: SCMP 인터뷰
 - ✓ 기술적 위협: “화웨이 퇴출이 무역합의보다 10배는 중요 ”
 - Thomas Cotton의 입법: SCS and ECS Sanctions Act 발의
 - ✓ 무력확장에 대한 대응: 인공섬 건설에 참여한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제재

4-3. 중국의 약점

❖ 무역

- 미중간 무역의 규모, 교역의존도, 교역품의 대체성, 결제통화 등에서 중국이 절대 열위
 - ✓ 중국이 관세로 맞대응 불가능

❖ 기술

- 원천기술(미국)과 응용기술(중국)의 차이로 인하여 전략적 대응 한계
 - ✓ ZTE, 화웨이, DJI 등 주요기업의 취약성 확인

❖ 금융

- (대내) 과잉부채, (대외) 결제통화
 - ✓ 환율조작국 지정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Secondary Boycott 발동시?

❖ 에너지

- 자원 순수입국으로서 취약성
 - ✓ 주요 석유수입은 말라카해협을 통한 해상수송

❖ 국방

- 미국이 전세계 무력자산을 압도적으로 점유
 - ✓ 중국은 주변국(접경국가 14개)과의 분쟁에 노출

4-4. 중국의 강점과 대응

❖ 중국의 강점에 대한 중국측 주장

- 정치구조의 효율성: **대표민주주의** vs. 대의민주주의
 - ✓ “중국은 장기전이 가능하지만, 미국은 선거에 의해 좌우된다”
- 국가(정부)와 기업의 관계
 - ✓ “중국기업은 정부를 믿지만, 미국기업은 그렇지 못하다 ”
- 이념적 갈등 조율 메커니즘: 정파간 이견 미미
 - ✓ “현재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 결속하고 있다 ”

❖ 중국의 대응

- (단기) 결연한 의지로 대항하면서 미중갈등 지속
 - ✓ “더 이상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
- (중기) 시장개방, 법치주의의 확대 불가피
 - ✓ 경제적 충격이 커지면 대내적 대립구조 가능성

4-5. 미중 갈등의 전망과 우리의 대응

❖ 중국경제가 처할 최악의 시나리오

- (단기) 국내 금융위기 가능성
 - ✓ 금융위기 → 위안화 평가절하, 외환보유액 감소, 단기적 인플레이션, 기업도산, 실업 증가
- (중기) 외국자본의 이탈
 - ✓ 위안화 평가절상 → 비용효율성 차원에서의 중국투자는 축소되고 중국내수용 투자만 지속
- 성장률의 급격한 둔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
 - ✓ 투자, 수출, 부채 주도의 성장이 중단되면서 중저속성장 국면에 진입
 - ✓ 성장둔화에도 불구하고 사회, 복지성 지출 수요가 급증
- 경제적 영향은 정치적 지형에도 파급효과
 - ✓ 중국에서 정치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

❖ 우리나라의 대응

- 중국의 취약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경도된 외교는 또다른 부작용 가능성
 - ✓ 냉전시대와 달리 미국은 이해관계에 의한 취사선택적 관계설정 경향
- 경제적 측면에서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념보다 국익차원에서의 접근 견지 필요성
 - ✓ 국방과 경제가 충돌한다면??



감사합니다